

## 근로기준법에 이어 최저임금도 개악!

# 정부·여당은 사용자 편이다



사진 출처: 장연대

최저임금,  
줬다 빼앗기 개악

8면

삼성의  
노조 외해 공작과  
한 노동운동가의 타락

3면

아일랜드  
여성 사회주의자 기고  
낙태죄 폐지  
국민투표 승리와  
좌파의 구실

4~5면

물가 범죄 수사  
경찰과 검찰의  
여성차별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다

4~5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노동당 내  
노선 투쟁과  
코빈의 대응

5면

민둥산으로 본  
북한 사회의 성격

7면

미세먼지와 경유차 2면  
네이버의 댓글 조작 -  
독점 해체가 해결책? 2면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서울 운행 제한

# 자동차 기업 재앙 질주 놔두고 노동계급에 책임 전가

김인식

하늘을 뿌옇게 덮은 미세먼지가 서울을 목욕시키는 일들이 일상처럼 돼 가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주의보 발령 횟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럴 때마다 해당 정부 기관, 서울시, 언론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야외에서 일하며 생업을 이어 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각한 국가의 대열에 합류했다.”(〈파이낸셜 타임스〉, 2017년 3월 29일치) 이 보도를 보면, 서울이 중국의 베이징과 인도의 뉴델리와 함께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했다.

《네이처》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각각 조사한 결과를 보면(둘의 조사 결과는 조금 다르지만), 현재 한국에서 대기 오염 때문에 숨지는 사람이 2만~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교통 사고 사망자 수의 4~5배이다.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특히 디젤)가 대기 오염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시행하거나(그조차 시행 두 달 만에 중단했다), 자동차 이용을 제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치는 너무 형편없고 뒷북이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주류 정당의 후보들은 문제의 원인도, 진정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다.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는 한심하게도 ‘도로 물청소’를 핵심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도로 물청소는 대기 중 미세먼지를 없애는 게 아니다. 게다가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겨울철에는 도로가 얼 수 있다.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의



이윤 지상주의 체제가 수천만 명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단적 대책”은 실제 대책은 없는 뜬구름 잡기다.

박원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직전 서울시장)는 도심 4대문 안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 디젤 차량, 저감 장치

주로 산업 시설과 가정 난방에서 나온 석탄과 먼지가 스모그의 주요 원인 이던 과거와 달리 차량 배기가스가 대기 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오늘날,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의 배출 가스 규제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박원순의 대책은 진정한 해결책은 회피한 채 평범한 노동계급 사람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것일 뿐이다.

디젤 차량이 한국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우리 나라 경유차 판매 비중은 2011년 33.9퍼센트에서 지난해 44.8퍼센트(82만여 대)로 높아졌다. 현대차는 올해 출시되는 신차 6대 중 5대를 디젤 판매 비중이 높은 SUV로 배치했다.

유가 인상 때문에 휘발유보다 싼 대안으로서 디젤 차량이 권장되기도 했다(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주행에서는 휘발유보다 디젤의 연비가 더 좋다). 정부는 세금 제도를 통해 디젤 차량을 장려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매일 미세먼지와와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디젤 차량을 선택한다.

따라서 노후 디젤 차량 운행 제한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에 세금을 부과

해 노후 차량에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장착해 주거나 싸값에 신차로 교체해주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자본주의가 도시를 무질서하게 설계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장거리 통근을 해야 한다. 한국 도시 계획의 우선순위도 차량이 도로·자전거·대중교통을 압도한다.

그런데도 박원순은 주요 간선도로 지하화를 추진했다. 그리 되면 교통량이 늘 것이다. 교통량을 감소시키겠다는 자신의 약속과도 어긋난다. 결국 박원순도 서울시의 많은 것이 계속 자동차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교통량 증가는 교통 지옥을 만들 뿐 아니라 공중 보건에도 악영향

을 미친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는 대기 오염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위생 문제가 됐다고 보고했다. 독성 물질이 포함된 대기 오염으로 매년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

사실, 세계 주요 나라의 지배자들은 이미 19세기부터 대기 오염이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각국 정부들은 대기 오염을 통제하려는 일은 별로 하지 않았다.

대중교통 강화 쪽으로 거대한 전환을 해야 한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값싼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자본가들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이다.

## 네이버 댓글 조작과 자본주의 언론

장호중

드루킹 사건으로 네이버의 뉴스 배치 조작과 댓글 조작이 도마에 오르자, 네이버는 앞으로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인링크 방식으로 제공되는 뉴스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고 첫 페이지에(모바일) 뉴스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스스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대신 다른 언론사들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아 자신의 시스템 안에서(인링크) 사용자들에게 보여 준다. 그런데 광고주들은 사용자들이 실제로 뉴스를 보는 페이지에 광고를 싣는다. 따라서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가 아니라 네이버에게 광고비를 지급한다. 네이버는 이렇게 얻은 수익 중 일부로 언론사에게서 뉴스를 산다.

요컨대, 기존에 광고주-언론사로 이어지던 돈의 흐름에 네이버가 끼여들어 뉴스 도매상 구실을 하는 것이다.



독점 완화 자체가 노동계급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도매상의 시장 점유율이 50퍼센트에 이르기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구글 같은 기업은 뉴스 검색 결과를 자신의 시스템 바깥(아웃링크) 즉, 언론사 자체의 웹사이트에서 보도록 연결한다. 대신 뉴스 페이지로 연결하는 검색 결과 화면에 광고를 싣어 수입을 얻는다. 네이버에 비하면 광고비 독식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전체 광고비 수익은 훨씬 크다.

네이버는 언론사들의 의견을 물어 아웃링크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70여개 언론사 중 단 한 곳만이 아웃링크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스스로 광고를 얻으려 다니는 것보다 네이버에 뉴스를 판매하고 얻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즉, 단순히 네이버가

언론사를 쥐어짜는 구조가 아니라 ‘공생’ 관계라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재벌과 그 하청기업들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네이버는 이런 언론사들의 입장을 공개하며 벌써부터 뜻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6년 4사분기를 기준으로 네이버의 수익 중 광고 매출은 75.8퍼센트에 이르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뉴스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언론이 편파 왜곡 보도를 일삼고 일상적으로 지배자들의 편에서는 것은 단지 네이버만의 탓이 아니다. 네이버가 뉴스 배치 조작 등 노골적으로 여론을 왜곡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에서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현대 언론은 자본가와 권력자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 뉴스 판매 외에도 언론사를 운영하려면 각종 설비와 기자재 운용, 고용 등에서 시장 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규모(영향력)이 커질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

된다.

물론 jtbc 같은 사례에서 보듯 경쟁하는 자본가들 사이에서 나름 중립을 지키려 하거나, 상대적으로 열세인 자본가들의 편에 서는 언론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논리 자체에 정면 도전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5월 28일 jtbc 뉴스룸은 이 소식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런 언론에 대한 불신은 커져 왔고, 특히 종이신문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다. 네이버 같은 온라인 매체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오히려 그 결과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그게 더 나은 선택인 것도 아니다.

계급으로 나뉜 사회에서 정치의 핵심 수단 중 하나인 언론은 중립적일 수 없다. 철저히 노동계급의 편(관점과 이해관계)에서 서서 그들의 재정과 인력으로 만들어지는 언론만이 일관되게 노동계급의 편에 설 수 있다.





‘무노조 경영’을 깨다 노조 설립 5년 만에 삼성에게서 직접 고용, 노조 인정을 얻어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2013년 7월 노조 창립 총회

##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 반재벌 정서는 노동계급 투쟁으로 나타나야 변화의 힘이 될 수 있다

김인식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최 아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구속했다. ‘삼성 장학생들’이 암약하는 국가기구로 알려진 검찰이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리라 믿는 것은 연목구어일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노조 파괴 문건만 6000여 건이라고 한다. 구속된 최 전무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닐 것이다. 그 립 ‘윗선’이 있을 것이다.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것도 아니다. 2013년에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폭로한 바 있다.

삼성그룹은 노조 설립 조짐만 보여도 노동자들을 미행·감시·회유·협박·폭행했다.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은 ‘유서’ 깊다. 이것은 삼성의 성장 비결과 직결돼 있다. 삼성은 철저하게 정치 권력에 달라붙어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 노동자들의 피땀을 쥐어짜 성장했다.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은 독재자들(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의 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꼬박꼬박 바치면서 특혜를 받았다. 그 손자 이재용도 박근혜에 뇌물을 바치고 경영 승계를 보장받았다. 수십 년 세월 동안 유지돼 온 부패한 정경유착의 표본이다.

이병철은 생전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안 된다”고 했다.

1950년대에 강패를 동원해 제일제당 노동자들의 농성을 탄압했다. 1987년에는 삼성전선의 민주노조 설립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1980년대 후반 삼성전관의 노조를 깨는 데 제임스 리와 이근안이 동원됐다. 제임스 리는 당시 악명 높은 노조 파괴 전문가이



2017년 2월 4일 삼성전자 사옥 앞에 모인 박근혜 퇴진·이재용 구속 집회 참가자들

자 안기부 끄나풀이고 미국 CIA의 하수인이었다. 이근안은 악명 높은 고문 기술자였다.

이병철이 죽자 “내가 ‘죽어도’ 노조는 안 된다”로 바뀌었다. 아들 이근희와 손자 이재용은 이병철의 유지를 충실히 받들었다.

그러나 거대한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 때마다 삼성 노동자들과 민중은 삼성 재벌의 처단을 요구했다.

1960년 4·19 혁명 때 민중은 부정축재자 이병철의 처단을 강력히 요구했다(이병철은 3·15 부정 선거 때 이승만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 이병철은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박정희 5·16 쿠데타가 터지자 귀국했고, 박정희와 끈끈한 관계를 맺었다.

2016년 10월~2017년 4월에 일어난 박근혜 퇴진 촛불 때도 민중은 이재용의 구속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동자들도 삼성에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끈질기게 투쟁했다.(적을 예우하는 협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한 개혁주의자의 주장은 온건함 정도가 아니라 배신적이다. 오른쪽 기사를

보시오.)

특히 대중적인 정치·사회 운동이 분출하면 삼성 노동자들도 이에 고무받아 투쟁에 나섰다. 1987년과 1988년 삼성조선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설립 투쟁이 그랬고, 근래에는 삼성전자서비스를 필두로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 삼성에스원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누식 대표지회장은 본지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합의[직고용과 노동조합 인정]는 박근혜 퇴진 촛불의 연장선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노조는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에서 삼성의 문제를 끊임 없이 제기했습니다.”

재벌에 맞설 힘의 진정한 원동력은, 공상적인 ‘재벌 개혁’론들이 아니라, 재벌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금 재벌의 ‘슈퍼 갑질’에 분통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 분노가 재벌사 소속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벌이는 투쟁과 만날 때, 진정한 사회 변화를 위한 힘으로 승화될 것이다.

## 조건준의 부패와 타락은 계급 협조 정치의 최악의 결과

박설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책임자를 선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쓴 노조 간부 조건준 씨(금속노조 경기지부 집행위원)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6월 5일 중집에서 그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고 한다.

노조는 앞서 5월 18일 성명서를 내 “삼성 자본을 위한 탄원서는 민주노조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그런 만큼 조 씨를 금속노조에서 제명해 노동운동의 원칙을 바로잡길 바란다.

최근 조건준 씨는 삼성 측으로부터 대가성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JTBC는 사측이 2014년 하반기 지지부진하던 노사협약에 도장을 찍게 하려고 조 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심리상담업체와 계약을 맺은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다.(4년간 5억 원대)

조 씨는 심리상담업체 선정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자체 논의를 거쳐 제안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설사 노골적인 대가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서비스 교섭에 관여해 온 노조 간부인 그는 마땅히 그런 제안을 거절했어야 한다. 하물며 부르주아 법률조차 (형식적으로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관련 직무에 있는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다. ‘김영란법’은 식사 제공도 3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조 씨는 쟁점이 된 2014년 7월 이후에 자신은 전국 교섭을 지휘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바로 직전까지 사측과 1대 1로 만나 밀실교섭을 이끌었던 당사자가 할 소리는 아니다. 더구나 그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버젓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공식, 비공식 교섭을 담당했던 집행위원’ 명까지 달았다고 한다.(<미디어오늘>)

### 삼성이라는 ‘특수성’?

이번 사건은 그저 우연적 일탈이거나 삼성이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한 난관 때문에 벌어진 문제가 결코 아니다. 노동자들 스스로의 단호한 투쟁보다 협상장 안에서의 중재와 타협을 우선시한 조 씨의 노골적인 개혁주의가 부패와 타락(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진 것이다.(물론 모든 개혁주의자들이 부패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동안 조 씨는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과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위

한 투쟁이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자 투쟁의 잠재력을 비관해 왔다. 이런 그의 지론은 노동자들이 ‘전부’를 따내려 하다가는 다 같이 죽는 꼴이 된다는 식의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외침을 ‘배부른 대기업 정규직의 자리 싸움’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계층 상승을 위한 개인적 이익 욕망’으로 치부한다. 주요 투쟁들에서 노동자 양보를 종용하거나 투쟁 자제를 설득하는 구실도 했다.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투쟁에서도 그는 지회에 적당한 타협을 하려면 분사 앞 집중 농성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농성 철수를 주장했다. 조 씨는 올해 4월 발표한 책 《노멀 레볼루션》에서도 당시 집중 투쟁을 분산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1대1 블라인드 교섭, 즉 밀실 교섭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영똥한 논쟁”으로 취급했다. 이는 사측과의 개별 접촉, 비공개 교섭을 금기시해 온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 현장 노동자들을 개무시한 처사다.

### ‘교섭 전술’?

노조 간부들이 이런 태도를 지속하다 보면, 점점 더 기층 노동자들의 투쟁보다 사측과의 ‘신의’를 지켜 타협을 끌어내는 능력, 기술을 중시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치켜세워주고 협상 파트너로 대우해 주는 사측에 대한 경계심도 무너지기 십상이다. 조 씨가 삼성 자본을 비호하는 탄원서를 내고 (그의 아내가) 부적절한 계약을 따내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도 그런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속노조 경기지부 임원진은 조 씨의 탄원서가 삼성전자서비스 직고용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교섭 전술’의 일환이었다며 그를 두둔하고 나섰다. 2014년에도 일부 활동가들이 삼성과의 협상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블라인드 교섭을 두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착각과 달리, 협상의 성패는 협상장 밖의 세력관계, 즉 노동자 투쟁의 전진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측에 칼을 버리고 투쟁의 정당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교섭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노동자들이 민주적 토론을 통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단결을 강화하고 투쟁의 힘을 끌어올리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 ★ 양승태의 대법원이 반노동 판결을 조율하다
-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 ★ 장신대, 성소수자 차별 반대 퍼포먼스가 학위 위반?
- ★ 독일: 극우에 맞서 7만 명이 거리로 나섰다







## 신흥국 통화 위기

# 다시 불안정해지는 세계경제

정선영

최근 아르헨티나에 이어 터키, 인도네시아 등에서 통화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5월 초 아르헨티나는 페소화 가치가 한 달 만에 15퍼센트 넘게 폭락했다. 기존 금리를 40퍼센트로 인상했지만 통화 위기가 진정되지 않아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아르헨티나의 올해 물가 상승률은 20퍼센트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끔찍한 고금리와 물가 인상, 그리고 정부의 친시장 정책으로 아르헨티나인들이 겪는 고통은 엄청날 것이다.

터키도 최근リラ화의 가치가 급락하자 기존 금리를 두 배로 올리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금리를 대폭 인상했지만 통화 가치 하락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케인스주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신흥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1997년과 같은] 예전의 외환·금융위기의 냄새를 풍긴다”며 우려했다.

크루그먼은 “신흥시장에서 최근 10년간 기업 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는데, 대부분이 외채이며 특히 달러 표시 외채”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 세계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2008년 위기 이후 실물 경제의 이윤율이 낮은 상황에서 값싼 신용을 바탕으로 경제를 부양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취약한 곳부터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 국제금융연구소(IIF)는 브라질, 인도, 터키에서 20퍼센트가 넘는 회사가 빚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있고 그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회복이 불충분하고, 세계경제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취약함

미국 경제는 회복세이긴 하지만 그 속도가 매우 더디다. 미국은 실업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아예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이 늘었다는 뜻이다. 미국的高용 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트럼프가 대규모 기업 감세를 하며 기업 투자를 고무하려 했지만, 기업들은 생산적 투자보다는 주식을 사거나 배당을 하는 데 더 많은 여유 자금을 쓰고 있다. 주가는 크게 올랐지만 기업들의 투자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순 산업 투자는 2014년 4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도 최근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안정 등이 더해지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올해 1사분기 성장

률이 2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세계경제는 2015~2016년의 침체,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회복기를 거쳐 다시금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월과 3월 전체 산업생산이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와 운송장비 등 제조업 분야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실업률도 악화하고 있다. 정부의 핵심 경제 관료들 내에서도 경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악하는 등 친기업적인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저항도 존재한다. 최근 브라질에서는 트럭 운전 기사들이 유가보조금 지급과 최저 운송요금 보장을 요구하며 도로 봉쇄 파업을 벌였다. 이 파업에 트럭 100만 대가 참가했다고 한다. 이 파업으로 연료 운송이 중단돼 학교들이 휴교하고, 시내 버스와 항공 노선이 마비되고, 북동부 페르남부쿠 주의 60개 도시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의 강력한 투쟁이 벌어졌고, 부분적인 양보를 얻어 냈다.

한국 노동자들도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의 고삐를 쥐어야 한다.



“IMF = 배고픔, 빈곤, 실업”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르헨티나의 거리

##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공무원 노동조건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 추진되는 성과주의 임금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공무원노조는 2002년 출범 때부터 정권의 온갖 탄압을 받아 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여러 차례 설립 신고 반려와 노조 사무실 폐쇄를 했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대표 노조로서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정부의 모진 탄압에 맞서 해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투쟁해 왔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노조 합법화를 반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노조 지도부가 설립 신고(합법화)의 조건으로 정부가 요구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규약에서 완전히 지운 것은 유감이다. 다수의 해직자들과 노조 내 투사들이 설립 신고를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을 내준 날 전교조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전교조의 법외노조 해결은 어렵다”고 했다. 공무원노조처럼 해직자 조합원 규약을 삭제해야 설립 신고를 내주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결국 박근혜의 적폐 중 하나인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을 오히려 전교조에게 전가하고 있는 꼴이다.

### 모순적

공무원노조 합법화 후, 여러 구청 지부들이 단체장을 초대해 공개적인 노조 현판식을 했다. 공무원노조와 정부 사이에 공식적인 협상도 시작됐다. 지난 정부 때 노조 현판을 떼어 가고 노조 사무실을 폐쇄했던 것에 비춰 보면, 격세지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공무원노조 내 활동가들은 노조 설립 신고를 계기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듯하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도 “교섭” 시대가 열렸다고 하며, 해고자 원직복직,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보장을 교섭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한다. 이 요구들은 공무원노조의 숙원이고 반드시 쟁취해야 할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일자리를 확대를 공약하고, 집권 기간 동안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약속을 어기고, 지난해 증원 계획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게다가 정부는 “공무원 증원 등 긴급조치가 필요하지만 공무원이 민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거나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은 문제”라며 일자리 예산을 늘리기보다 기존 공무원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공무원 임금은 2017년 기준으로 민간 부문 임금의 86퍼센트에 불과하다. 2004년 95.9퍼센트까지 접근하기도 했지만, 그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올해 임금 인상률은 2.6퍼센트에 불과해 공무원 임금 수준은 전년보다 더 하락했다. 게다가 하위직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수당, 연가보상비도 줄이고 있다. 정부는 초과근무수당 등을 줄이고 그 돈으로 신규 채용 재원으로 쓰겠다고 한다. 이게 문재인 식 소득성장론이다!

무엇보다 ‘특혜’라고 공격해 온 공무원연금도 이명박근혜 때 최악의 삭감으로 인해 노후조차 불안해졌다. 특히 2010년 이후 들어온 하위직 공무원들은 연금이 대폭 삭감됐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붙지 않도록 각 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혁신

의 주체가 되어 과감하게 정부 혁신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공공연히 공무원들을 압박한다. 그러나 진정한 혁신의 대상은 양승태 등 고위직들이다.

### 사회적 파트너십

한편, 문재인은 박근혜가 추진했던 성과연봉제와 성과주의 임금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말뿐이었다. 실제로는 성과주의 임금 정책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박근혜 때와 달라진 점은 노조와 학계, 법조계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성과주의 정책을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사회적 파트너십’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와 달리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하고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지만 전임 정부와 같은 공격을 하고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 삭감에 합의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결과”라고 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협상 테이블에 노동조합을 끌어들이는 것을 ‘사회적 합의’로 포장했다. 당시 문재인은 “고통을 분담해 준 공무원들에게

큰 보람이 될 것”이라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삭감분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겠다는 합의는 공무원연금만 개악한 이후 모르쇠로 일관해 결국 공수표가 됐다. “큰 보람”이 되기는커녕 노동자들은 그저 고통만을 전담하고 ‘먹튀’를 당한 것이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는 지배자들이 약간의 양보도 꺼리고 오히려 전에 썼던 것도 회수해 가려 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듣기 좋은 말로 포장돼 있지만 결국 노동자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철밥통’에 비유하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 운운했지만 최근 최저임금법 개악에서 보듯 이들의 ‘노동 존중’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드러나고 있다.

결국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고 ‘노동 존중’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노조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고 정부가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현실적인’ 타협안을 고민하면 안 된다. 노동조건 악화를 노리는 각종 정책에 맞서 전열을 가다듬고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 왜 북한에는 민둥산이 엄청 많을까?

## 북한 국가자본주의와 산림 황폐화

김영익

5월 24일 녹색연합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조사한 북한 산림 황폐화 실  
태를 언론에 공개했다.

녹색연합이 밝힌 북한 산림 황폐화의 실태는 심각했다. 파주 임진강 맞은편 북한 지역(개성특급시)은 나무도 숲도 없다. 개성 일대의 수계가 모여 흐르는 사천강 주변의 산들은 모두 민둥산이다. 산자락 아래 마을 주변에는 다락밭(계단밭)이 조성돼 있다.

녹색연합은 비무장지대에서 확인한 북한 산지는 헐벗어 있고, 산림 황폐화로 인한 산사태도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림이 황폐화돼 북한에 민둥산이 많은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오늘날 북한은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산림 훼손이 심각한 나라로 꼽힌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1990~2016년에 북한 산림의 약 40퍼센트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해마다 평양 면적과 비슷한 산림이 사라진 셈이다. 2012년 유엔환경계획(UNEP) 등은 북한 산림이 훼손돼 수많은 식물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동물도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거대한 환경 재앙이다.

## 축적

산림 황폐화는 재난 피해로 이어져, 북한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산림이 사라져서 홍수, 가뭄, 산사태 등의 피해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6년 8~9월에 발생한 대홍수로 북한에서 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십만 명이 이재민이 됐다.

이런 북한 산림 황폐화는 사회주의의 실패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바로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모순과 위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북한 산림 황폐화처럼 자본주의가 인간과 자연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에서 비롯한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북한 지배 관료들은 소련이 1928년 이래 걸어온 길을 따라 급속한 공업화 노선을 취했다. 남한 등과의 군사적 경쟁 압력 때문에 북한 관료들은 중공업 기반 마련에 강박적으로 매달렸다. 그래서 중공업 투자 확대(즉, 축적)에 가능한 많은 물자를 쏟아부었고, 노동자들에게 끊임없는 희생과 동원을 요구했다. 김일성은 공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농업과 인민의 소비를 희생시켰다.

북한의 중공업 우선 노선은 초기에 성공을 거뒀다. 1950~1960년대 북한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공

업화된 나라라고 평가받았다.

옛 소련, 북한 등 동구권에서 벌어진 “축적을 위한 축적, 생산을 위한 생산”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핵심 동역학이다. 따라서 옛 소련, 북한을 비롯한 동구권도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는 성장 둔화와 경제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1960년대 말 북한에서 경제 침체의 조짐이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 도움 없이 국내 가용자원만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처지였다. 비슷한 때에 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한 소련보다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 같다.

경제 침체로 경제 분야별 불균형과

난비가 더 심해졌다. 북한은 중공업에 투자를 집중하느라 농업기반시설에는 충분히 투자할 수 없었다. 결국 식량 생산 증대가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중공업에 투자할 자원을 농업으로 돌리지 않았다. 반대로, 1970년대 들어 식량 증산을 위한 대규모 산지 개발을 추진했다. 이때 다락밭, 비탈밭이 많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산림이 사라진 만큼 경지가 생겼다.

그러나 1970년대에 시작된 산림 축소는 1990년대에 재앙으로 치달았다. 동구권이 붕괴하면서 가뜰이나 침체 하던 북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석유·전력 공급이 붕괴하자 투자 우

선순위가 낮은 농자재(비료, 농약) 생산부터 급감했다. 그러자 북한은 무분별한 산지 개간 같은 '자연 약탈적' 농업에 더욱더 의존하게 됐다. 연료가 부족해 민가 뒷산의 솔 만한 나무는 모두 빨간감으로 사라졌다. 외화벌이를 위한 벌목도 크게 늘어 산림 황폐화가 더 가속화했다.

북한이 이윤이 아니라 인민의 필요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였다면 이런 상태 파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 민동산은 세계 자본주의가 낳는 보편적인 환경 재앙이 북한에서 특수한 형태로 구현된 문제다.

## 북한의 다른 환경 문제

자본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선순환적 상호작용 과정 자체를 파괴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본가들은 이윤 경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을 혁신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기적인 사회적·환경적 위험도 생산한다.

20세기에 자본주의 생산과 축적의 규모가 커지면서 환경 파괴도 심각해졌다. 오늘날 기후변화의 현실은 자본주의가 낳는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준다.

옛 소련 같은 동구권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국가들도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유기적 일부였다. 예컨대 1988년 소련의 국민총생산(GNP) 대비 (산성비를 유발하는) 이산화황 배출량은 미국의 2.5배였다. 1986년 소련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

나, 히로시마 원폭 때보다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을 대기에 쏟아내기도 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산림 훼손 외에, 대표적으로 공해 문제가 있다. 1986년 북한 부주석 리종옥이 북한은 “공해 없는 나라”라고 선전했지만, 유엔환경계획은 2008년 현재 평양의 연평균 이황산가스 농도가 서울보다 더 높다고 보고했다. 올해 3월 북한 당국은 평양의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분석했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남한에서 일어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임을 대번에 알 수 있다.

18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 맑시즘2018

2018.07.19(목) - 22(일) | 장소: 서울 | 주최: 노동자연대

★ 나홀간의 토론의 장 ★ 차별과 불평등, 착취에 반대하는 토론  
★ 청중 발언 시간 보장 ★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집중 토론할 들도 없는 기회

## marxism.or.kr

참가신청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 웹사이트에서 참가비를 확인하고 참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marxism.or.kr  @marxismTwit





최저임금, 쫓다 빼앗기 개악

# 문재인 “노동 존중”의 위선

장우성

5월 28일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여금뿐 아니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개악이다.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상여금, 7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으로 포함되고, 산입범위를 매년 늘려 나가 2024년에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즉, 최저임금을 올려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쫓다 빼기’ 개악인 셈이다.

2018년 최저임금(월 157만 3770원)을 기준으로 하면, 당장 내년 부터 월 상여금 중 39만 원, 복리후생비 중 11만 원을 뺀 나머지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

예컨대, 월 기본급 157만 원,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으로 월 227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상여금 11만 원, 복리후생비 9만 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돼, 기본급 20만 원이 깎이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기본급은 최대한 적게 주고 그 대신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삭감해 온 대기업들은 앞으로 몇 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연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를 최대한 보호했다며, 저임금 노동자 중 최대 21만 6000명(6.7퍼센트)만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못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근거는 2016년 임금 자료와 2019년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임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는 동안 이미 임금이 오른 저임금 노동자가 꽤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9년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자본가들의 '소득(이윤)을 중시하는 것이었나

임금이 오르지 않을 저임금 노동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민주노총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산입 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30퍼센트가 임금 인상에서 손해를 본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14만 명 중 절반 이상이 2024년까지 임금 인상에서 손해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현재 매월 급식비 13만 원, 교통비 6만 원을 받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월 8만 원, 연간 96만 원 상당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빼앗기게 된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식비, 교통비 등 각종 복리후생수당과 상여금으로 충당해 온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자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또, 고용주가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 단위로

나눠서 지급하려 할 때, 노조나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칙도 덧붙였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 내지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상 최소한의 방어조항조차 무력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 쪼개기'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더해 임금을 삭감하려는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 분노가 커지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소득 주도 성장” 등을 표방하면서, 최소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는 개선해 줄 것처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노동시간 주 52시간 단축 등을 누더기로 만들더니, 최저임금마저 개악해 임금 인

상 효과를 무력화해 버렸다. (관련 기사: 본지 242호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격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가?’)

이런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중소 상공인을 비롯한 사용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개악은 찰떡 공합으로 해 놓고 보수 야당의 개혁 방해 프레임은 유지하는 것은, 개혁 염원 지지층이 이탈하지 못하게 하려는 술책이다.

더 근본에서는 2017년에 회복되는 듯했던 한국 경제가 최근 다시 ‘침체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악화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갈등, 중동 내 갈등 등으로 한국의 수출 확대 전망이 점점 불확실해지고, 석유값 상승과 신흥국 통화 위기 등으로 세계경제가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사용자들의 이윤을 보호하는 편에 선 것이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대중의 지지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을 틈타 밀

어붙이면 큰 저항없이 노동 개악을 이룰 수 있다고 봤을 것이다. 남북 화해 국면에서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포퓰리즘 정치 때문에 문재인의 개악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못할 것도 계산에 넣었을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저임금·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에 고임금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는 공격도 더 강화할 수 있다. 개악안이 통과되자마자 <한겨레>는 다음날 사설에서 금융기업의 고임금을 문제삼았고, 경총은 직무급제 도입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배신감을 느끼며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참가 중단을 선언했다. 그리고 6월 초 규탄대회, 100만 서명운동,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 등의 투쟁 계획을 공표했다.

한국노총도 개악안 통과 다음 날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속 노동자위원 전원이 항의하며 사퇴했다.

양대노총과 진보정당들은 문재인에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 최저임금 개악을 촉구하고 집권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인 지금, 이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에 불참을 선언한 만큼, 그에 결맞게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 집행부는 사회적 대화 성사에 집착하면서 예상되는 최저임금 개악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는데 소홀했다. 개악이 임박해서야 민주노총은 파업 지침을 내리고 5월 28일 전국 5만여 명 규모의집회를 열었다. 아쉽게도 그 파업은 2시간 파업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개악과 ‘노동 존중’ 정책 폐기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커진 지금, 실질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 파업에 초조함 드러내기 시작한 오라클 사측

한국오라클 노동자들이 5월 16일부터 단호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투쟁은 글로벌 IT 대기업에 대한 세간의 편견을 깨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했다. 특히 IT 노동자들이 뭉쳐서 싸울 힘이 있음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관련 기사: 본지 249호 ‘나쁜 노동조건 반대, 8일째 파업중인 한국오라클 IT 노동자들을 보시오’)

이런 힘 때문에 최근 사측이 노조에 대화를 제의했다. 이 자리에서 “매출에 타격이 심하다”, “고객 서비스 부서

가 망하게 생겼다”, “고객사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금방이다” 하며 초조함을 드러냈다.

물론 사측은 파렴치하게 “파업 중이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파업하지 않았다면 요구를 들어줄 생각도 없었던 자들이 말이다.

그 의도는 명백하다. 파업으로 뭉쳐있는 노동자들을 흐트러뜨려 제압하겠다는 뜻이다. 한 노동자는 “지금 복귀하면 죽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사측이 초조함을 드러내기

시작한 지금, 파업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민주노총과 사무금융연맹 등의 연대도 확대돼야 한다. 이번 파업이 승리한다면, 더 많은 IT 노동자들이 용기를 얻고 투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노동조합은 투쟁기금을 전달했다.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조직돼야 한다.

안형우

기사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월 30일 아셈타워 앞 오라클 파업 집회